

이중부양에 희망없는 희망퇴직... 사지 물리는 '사오정'

(부모·자식)

(死地)

(45세 정년)

자, 살자! 자살률 1위 20명 칼출하자

③ 천덕꾸러기 된 40·5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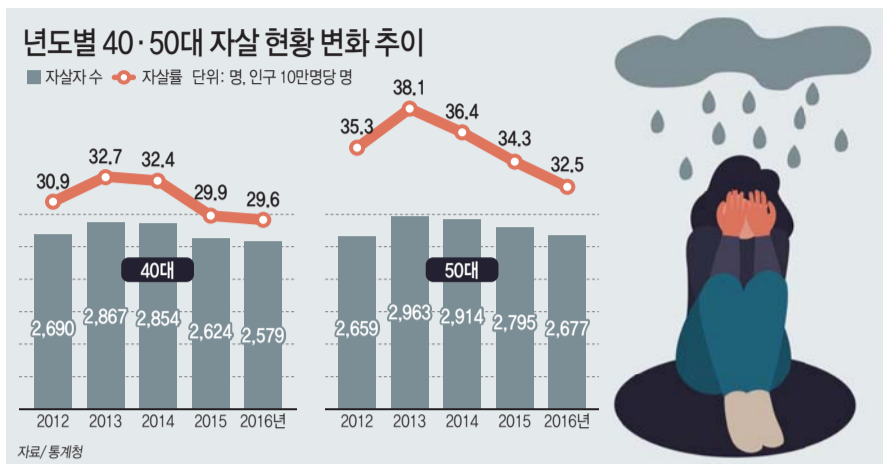
40대 71%, 50대 79% 부모 부양
48% “경제적으로 가장 부담 돼”

1년간 성인자녀에 월 74만원 지원
소수상류층 제외 부모 ‘노후 위협’

청년 직업훈련, 출산청년 지원 등
맞춤 지원으로 부양부담 덜어줘야

한국 경제의 허리 중년층이 휘청인다. 불혹과 지천명은 사오정과 오륙도가 된 지 오래다.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진 한국 사회는 ‘45세가 정년이다’, ‘56세까지 회사에 다니면 도둑놈’이라는 뜻의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며 부모와 자녀 사이에 ‘긴 세대’들에게 퇴직 압박을 가했다. 설 자리가 없어진 대한민국 4·50대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12일 보건복지부의 ‘2018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자살자 규모는 4·50대에서 최대였다. 40대 자살자 수는 2012년 2690명, 2013년 2867명, 2014년 2854명, 2015년 2624명, 2016년 2579명이었다. 하루 평균 7명의 40대가 자살한 셈이다.



50대 자살자 수는 2012년 2659명, 2013년 2963명, 2014년 2914명, 2015년 2795명, 2016년 2677명이었다. 지난 5년간 50대 1만4008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노쇠한 부모에 켈거루 자녀까지

한국의 중년은 왜 죽는 걸까. 대한스트레스학회 학회지(제21권, 4호, 2013)에 실린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생활 스트레스와 직업 안정성이 중년 성인의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붐 세대에 태어난 이들은 노쇠한 부모를 돌보아야 했고,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자녀들을 부양해야 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부양환경변화

에 따른 가족부양특성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40대의 71.1%, 50대의 79.3%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절반 정도(48.4%)가 부모 부양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꼽았다.

보고서는 “경제적 부양은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고 가족 욕구와 경제력에 따라 다원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공적 부양 시스템을 확충하고 가족 공유 부양 영역인 정서적 부양이 담보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5년 발표한 ‘가족 형태 다변화에 따른 부양체계 변화 전망과 공사 간 부양부담 방안’에 의하

면, 중년 부모의 39%가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자녀에게는 1년간 월평균 73만7000원의 부양비용이 들었으며, 부모의 31.6%가 자녀를 부양하는 비용이 부담된다고 답했다.

연구원은 “부모가 성인 자녀를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것은 소수의 상류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계층에서 부모의 노후를 위협하는 일이다”며 “특히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가족의 경우 불평등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구직 포기 청년층을 직업훈련과 취업 연계를 통해 사회로 끌어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성인자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청년협정 정책이 좋은 예다. 컬럼비아주는 학업을 마치지 못한 성인기로 진입이 어려운 청년에게 학비를 제공하고, 취업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직업연계 및 직업학교 등록을 지원한다. 출산한 청년에게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는 등 욕구에 맞는 맞춤형 지원으로 중년층의 성인 자녀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희망 없는 희망퇴직

지난 3월 희망퇴직이 결정된 한국GM 근로자 이모(55) 씨와 고모(47)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국 4·50대는 부모와

자녀 ‘이중 부양’ 고통과 함께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직장인 5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체감 퇴직연령’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이 예상하는 평균 퇴직연령은 50.9세였다.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의 66.5%가 ‘현재의 고용상태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10명 중 8명(81.5%)이 자신의 고용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제15차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신중년 일자리 확충방안’을 발표하며, 내년도 신중년 대상 일자리 예산 규모를 올해의 두 배 이상인 2715억원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내년에는 올해(1만8694개)보다 2만5216개 늘어난 4만4000여개의 신중년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연구원은 “노인들의 소득보장과 고령층의 고용개선을 위해 노동 고용정책을 활성화하고, 연금제도를 비롯한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들이 노년기로 진입하기 이전에 조기 퇴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및 정년연장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604개 편의점 로또 판매권 회수

기재부, 내년 취약계층 대상
온라인 복권 판매점 모집

정부가 편의점 법인이 소유한 로또 판매권을 오는 2021년까지 모두 회수하기로 했다. 이르면 내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판매점을 모집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제123차 복권위원회 열어 GS25, CU, C-SPACE 편의점 법인이 소유한 로또 판매권 604개를 회수하기로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편의점주 개인이 소유한 1757개 판매권은 회수 대상이 아니다.

기재부는 법인이 직접 로또를 팔았던 8개 편의점 판매권에 대해서는 올해 말 계

약 종료를 끝으로 회수할 계획이다. 편의점 법인이 가맹점주에게 계약을 통해 빌려준 596개 판매권은 오는 2021년 말 회수한다.

회수된 판매권은 이르면 내년부터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돌아간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내년 중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법인 판매권 회수분과 개인 판매권 자연감소분 등을 고려한 적정 판매점수 산정을 위한 조치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총리실의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 중 법인판매점 단계적 축소 결정과 복권법 입법 취지인 취약계층 우선 계약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min0812@

‘취업 후 학자금’ 미상환율 상승 전환

의무상환 1794억 중 8.1% 미상환
4년 연속 하락하다 작년부터 반등

재학기간 중 빌린 학자금을 취업 후 갚아나가는 ‘취업 후 학자금’의 미상환율이 지난해 처음으로 상승했다. 청년층 고용난의 여파로 풀이된다.

12일 국제청 국제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 후 학자금 의무 상환대상 1793억9000만원 중 8.1%인 145억3000만원이 상환되지 못했다.

이는 전년 미상환율(7.3%)보다 0.8%p 상승한 것으로 미상환율이 오른 것은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처음이다.

취업 후 학자금은 일반 국가장학금과 달리 취업을 한 뒤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소득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근로·종합·양도소득의 의무상환 비율은 기준 소득 초과분의 20% 수준이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대상 금액은 2012년 68억원에서 2016년 1247억원으로 급증했지만, 미상환율은 같은 기간 17.8%에서 7.3%로 빠르게 하락했다. 하지만 지난해 상환대상금액보다 미상환금액이 더 빠르게 늘면서 미상환율은 2014년(13.0%) 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다.

취업 후 학자금 대출 미상환율 상승은 청년 취업난과 함께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취업 비중이 증가한 탓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8월 기준 대졸이상 비정규직은 213만3000명(32.6%)으로 비정규직 중 비중은 고졸(44.2%)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지만, 전년 대비 증가 폭(4.1%)이 가장 컸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지난해까지 2년 연속 9.8%를 기록, 통계 집계가 이뤄진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올해도 1분기 10.0%, 2분기 10.1%, 3분기 9.4%를 기록하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8년 8월 말 기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의 연도별 연체 현황’을 보면,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가 연체된 인원이 2만8069명에 달하고, 연체 잔액도 1541억 원인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한홍수 기자 hys@r

사립유치원 원아모집 일정 첫 전수조사

교육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대상

교육부가 처음으로 전국 사립유치원들의 2019학년도 원아모집 일정을 전수조사한다. 교육부는 그동안 휴·폐업 유치원 수만 조사해 왔으나, 유치원들이 모집일정을 내놓지 않고 있어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오는 16일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관내 사립유치원 원아모집 일정을 취합해 집계할 예정이다. 집계결과는 내주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지난 6일 17시30분을 기준으로 집계한 휴·폐업 사립유치원은 전국 38곳으로 전체 사립유치원 4083곳의 1%도 되지 않는다. 하지만 원아모집 일정이나 설명회를 보류하거나 정하지 않은 유치원은 이보다 많다.

내년에 유치원에 보내야 하는 자녀를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3법 국회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둔 학부모들은 인근 유치원들이 휴·폐업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모집 일정이나 입학설명회를 열지 않으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원아모집 일정을 파악한 뒤 이유없이 모집일정을 미루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적 처분을 내릴 수 있을지 검토할 방침이다. /한홍수 기자

중소 근로자 전용 임대주택 4만호 짓는다

중기벤처부-국토부

2022년 3만호 입주, 1만호 추가공급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국토교통부가 손을 잡았다.

2022년까지 중소기업 등 근로자 전용 임대주택을 4만호 건립·공급하고 주거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에 메이커스페이스, 청년몰 등을 들여와 창업을 돕기로 한 것이다.

중기부는 12일 경기 화성 산단형 행복주택에서 국토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일

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과 도시재생, 국토교통 분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2022년까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3만호를 입주시키고, 사업승인을 통해 1만호를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주택은 중소기업 전용주택,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2022년 이후 추가 입주가 가능한 1만호도 같은 용도로 쓰인다.

특히 이들 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해 ‘중기 취업 청년 입차

자금 용자’ 상품을 통해 주거비 부담도 줄여줄 방침이다.

또 공공임대주택 단지내 상가를 청년, 사회적기업, 소상공인에게 시세의 50~80% 수준까지 깎 임대료로 2022년까지 430실을 공급하기로 했다. 당장 올해에도 115실을 선보인다.

중기부 관계자는 “국토부가 추진하는 주거지원 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중소기업이 보유한 토지 중 주택공급에 적합한 토지를 조사해 정보를 제공하고, 토지 제공 중소기업엔 금융·R&D·마케팅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